

‘원세훈 각본·감독’ 국정원 선거 개입 적나라

〈전 국정원장〉

정부 정책 반대편 무조건 '중복세력' 딱지 붙여

“문재인 북으로 보내라” 등 야권후보 반대 게시물

세종시·4대강 등 국정현안 ‘온라인 여론조작’ 시도

검찰이 14일 발표한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보면 원세훈 전 원장과 국정원 직원들은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주민투표 등 각종 선거 때마다 지지 사항 또는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국내 정치 및 선거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대선과 관련해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반대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성향을 보여 국정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선거 관련 글 외에도 원 전 원장과 국정원은 세종시, 4대강 사업, 자유무역협정(FTA), 제주 해군기지, 주택정책 등 주요 국정 현안과 관련해 온라인 여론 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세훈 “북한이 범아편 선거운동하고 있다”=검찰은 국정원의 이 같은 정치개입 및 여론조작 활동은 원 전 원장의 그릇된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이 국정원 부서장 회의에서 지지·강조한 내용은 국가정보기관 수장의 말이라고는 믿기 힘들만큼 편파적이고 그릇된 내용으로 일관했다.

원 전 원장은 “세종시 등 국정 현안

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좌파단체들이 많은데 정공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2010년 1월), “좌파 교육감들이 주장하는 무상급식 문제는...포퓰리즘적 허구성을 국민에게

홍보해야 한다”(2010년 11월) 등의 발언을 통해 정치에 개입했다.

선거 개입 관련 원 전 원장의 지지 사항은 더 노골적이다.

“지방선거도 이제 있고 좌파들이 여기 자생적인 좌파도 아니고 북한 지령받고 움직이는 사람들이다”(2010년 1월), “사실상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오는데, 요번에 지방선거에서는 2012년도에 정권을 바꿀 수 있도록 다 모아라. 단일화해라...”(2010년 6·2 지방선거 직전) 등의 발언이 원장 지지·강조사항이란 이를

하에 국정원 전체에 배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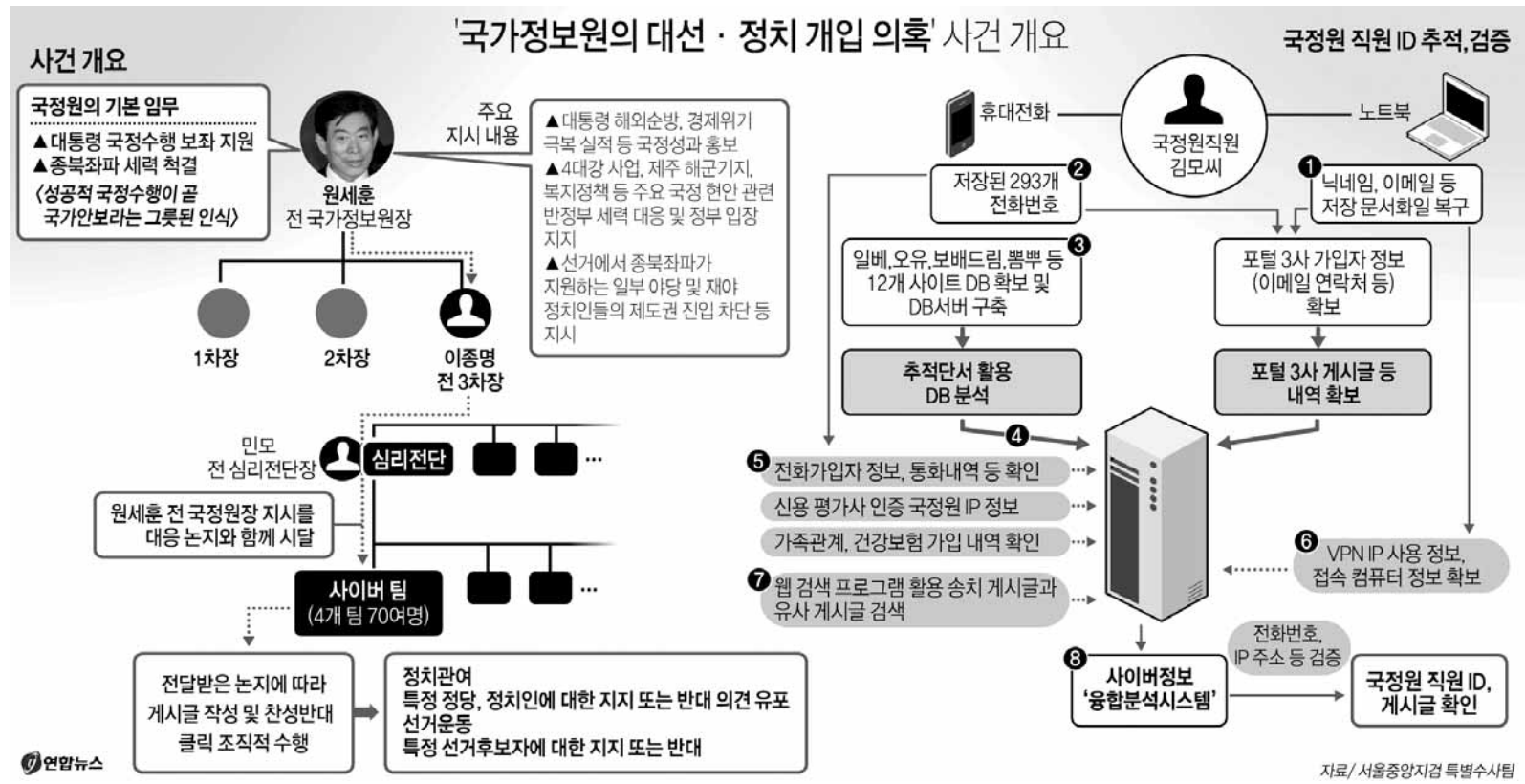
◇직원들 “문재인 북으로 보내라”=원 전 원장의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게시한 글 내용은 공무원이 한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자극적이고 노골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문재인 북으로 보내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천안함 폭침 후 나온 5·24 대북제재까지 해제하겠다고 한다. 국민은 어떤 후보가 우리 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고 책임질 수 있는지 눈여겨봐라”(2012년 11월 23

일) 등 국정원 직원들은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에 대한 글은 인신공격에 가깝다. “이정희 뽑고 싶다 ‘누X을’, ‘헛XX을’, ‘마취없이 덧나를’, ‘머리XXX’”(2012년 12월6일)이라는 인신공격성 악담도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포털이나 인터넷 사이트 정치 관련 뉴스와 글에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는 방식으로도 선거 개입을 시도했다. /연합뉴스



김동철 “정당공천 폐지 정당법 위배”

내년 광주시장 불출마...안철수 민주당 입당해야



민주당 김동철(광주 광산 갑) 의원은 16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또 내년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광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당이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은 현재 정당법에 맞지 않다”며 “현역 의원의 70~80%가 정당공천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선공약과 돼 발뚱이 잡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약은 지키는 게 맞는 것이지, 공약을 이행했을 때 상황이 악화한다면 안 지키는 게 좋을 수 있다”며 “정당공천제 폐지는 정당의 기능과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천제도에 부작용이 있다면 그걸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선거 출마설과 관련해 “지방자치나 지방행정에 관심은 있지만, (내 자신이) 시장에 적합

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생각 한다”며 “당 지도부에 진출할 때까지 중앙정치에 도전할 것”이라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호남에서의 안철수 신당 지지를 상순에 대해 “정당은 인물과 정책으로 평가한다. 안철수 신당은 지금 인물도 없고, 정책도 없는데 호남에서 신당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안철수 신당을 진짜 지지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높다고 생각된다”며 “이는 민주당이 변화하면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다는 뜻도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안 의원이 결단을 내리고 민주당에 입당해 지도자적 결단을 내리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정가 라운지

이낙연 “우수 조달 공동상표 우선 구매대상 포함”

우수 조달 공동상표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제품이 앞으로 공공기관 우선 구매대상에 포함된다.

16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이 ‘우수 조달 공동상표 지정물품’을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토록 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다. 이는 이 의원이 지난 7월 기술과 성능 개발에 노력한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 중소기업청에 서면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장병완 “연구개발특구 활성화 통해 지역중소 육성”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광주·전남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연구개발특구 활성화를 통한 지역중소기업 육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지난 15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연구개발 특구 내 기업 및 기업체 관계자 20여 명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광주·전남지역은



경제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R&D 개발을 통한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연구개발특구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용판, 노골적 수사 ‘축소·왜곡’

〈전 서울경찰청장〉

중간결과 발표 전날 결론 내놓고 다음날 ‘면죄부’ 공개

檢 “D데이 정해 일사천리 발표... 교묘하게 선거 운동”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해 경찰의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권한을 남용해 결과를 왜곡한 것으로 결론냈다.

김 전 청장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이미 ‘대선 전 D-데이’에 맞춰 선거 개입 의혹을 해소해 주기로 결심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결국 일선 수사팀이 허위 보도자료까지 발표하게 해 교묘하게 선거 운동을 했다는 결론이다.

14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

장 윤석열)에 따르면 수사경찰서는 지난해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에 대한 민주당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중 대선을 사을 앞둔 12월16일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앞서 김 전 청장은 14일부터 출근해 보고를 받으며 직접 상황을 챙겼다. 보고된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컴퓨터가 아닌 수기로 보고서를 만들라고 지시했고 고발장을 가져와 직접 검토하기까지 했다.

그는 15일 밤부터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 및 정치관계 의혹을 해소해 주는 내용으로 미리 보도자료 초안을 만드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김 전 청장은 ‘대선 전 D데이에 맞춰 선거 개입 의혹을 해소한다’는 생각을 하고 보도자료 작성 및 브리핑 준비를 추진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결국 경찰은 긴급 회견에서 ‘대선 후보 관련 비방·지지 게시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면죄부를 주는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당연히 축소 수사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검찰은 50여일 간의 수사 끝에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았다. 당시 경찰의 발표는 김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축소·왜곡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민주 “검찰 국정원 면죄부 수사

국정조사로 진상 철저히 밝혀야”

민주당은 지난 14일 검찰의 국가정보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용두사미식 면죄부 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며 기소하지 않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재신정을 하고, 국회에서의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위’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반대의 결과를 내놓았다. 당시 경찰의 발표는 김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축소·왜곡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나아가 부실수사 의혹을 부각시키는 한편 경찰에 축소·왜곡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배후에 대한 제보가 있다며 ‘몸통살’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민중법사위원 기자회견’에서 ‘몸통’에 대한 제보가 당에 접수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배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3년 10월 1일 OPEN

3.3㎡ 당 임대료 200만원
각 과목별 집합 의료타운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2013년 10월 1일 OPEN

3.3㎡ 당 임대료 200만원
지하 수영장 3.3㎡ 당 80만원
볼링장, 골프장 3.3㎡ 당 150만원



상업용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